

# 영산강변 파크골프장 건설 주민-환경단체 이견

### ‘저렴하게 골프’ 어르신들 선풍적 인기...광주 북구 신설 추진 주민들 “북구에도 생겨야” vs 환경단체 “다른 부지 검토해야”

광주시 북구 연제동 ‘파크골프장’ 건설을 두고 북구 지역민과 환경단체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북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구 지역민들은 ‘타 자치구에 최소한 한 곳씩 있는 파크골프장이 북구에만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건설부지가 영산강 인근으로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광주시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구는 북구종합운동장 인근 영산강 하천부지인 연제동 730번지 일대(4만 3738㎡)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파크(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미니 골프의 일종이다. 골프보다 쉽고 장비가

저렴하다 보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게다가 2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온종일 칠 수 있어 광주에서도 2-3년 전부터 노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북구 파크골프협회를 중심으로 북구에 파크골프장 건설 민원이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타 자치구에 모두 있는 파크골프장이 북구에만 없어 불편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에는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공 파크골프장이 총 8곳(광주시 4곳, 동구 1곳, 서구 1곳, 남구 1곳, 광산구 1곳)이 있다.

북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은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없어,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워낙 파크골프의 수요가 많아 타 자치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데 눈

치기 보인다는 것이 민원의 이유다.

김선재 광주시 북구 파크골프협회장은 “파크골프장은 노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공간,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재활치료 하는 공간이다”며 “다른 지역의 파크골프장도 워낙 수요가 많고 서로 아는 사이다 보니, 북구민들이 가면 눈치가 보인다. 심지어 텃새를 부리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일 광주일보가 방문한 타 자치구 파크골프장은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을 방문한 김도섭(61)씨는 “함평, 담양 등 다른 지역 파크골프장에 가면 ‘우리도 치기 힘든데 타지 사람들 안 받는다’고 텃새를 부린다”며 “북구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천명이 넘는데 칠 곳이 없어 타 자치구까지 와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민원을 감안해 북구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파크골프장 부지를 찾아 건설에 나섰다.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해당 부지 점용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영산강 하천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하

면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지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고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도 반대의 한 이유다.

지난 1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방문한 해당 부지에서도 수달, 삿,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나무와 풀 등 식물이 울창한 지역은 은폐물 삼아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완충지대를 전부 밀고 잔디로 만들어버리면 동물들은 살 곳이 없어지게 된다. 게다가 인근 주변 오염도 심화될 것이니 타 부지에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구는 관내에 북구민들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부지가 이곳 외에는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환경단체와 협의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5·18 기념식 등 행사 앞두고 경찰, 다중시설 대테러 활동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경찰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활동을 펼친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지역에서 치러지는 중요 행사에 대한 테러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송정역, 광주공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광주경찰 특공대 경력을 전진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특공대 전진배치는 18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에는 광주경찰 특공대원들이 다중이용시설 내·외부 순찰 및 테러 취약요소를 점검한다.

특히 ▲탐지견(2마리) ▲폭발물 탐지·처리 장비 ▲안티드론 장비(전파차단기·드론탐지기) 등을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테러 활동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점검 활동을 전개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중요 행사 전·후로 다양한 테러로 안전활동을 전개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여름 날씨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11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 운동장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가해 물놀이 즐기고 있다. 이날 광주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조여름 날씨가 이어졌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일본 사죄 못 받고 어찌 눈 감으셨을까

### 강제노역 양영수 할머니 별세



가는 부속품에 국방색 페인트 칠하는 일을 반복했지만 제대로 씻을 수조차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목욕을 시켜줬는데, 이마저도 일본 사람들이 먼저 목욕하고 난 뒤였다. 더러워진 물에 강

제동원 된 200여명을 한꺼번에 밀어넣어 물구경도 못해 볼 정도였다. 작업복도 한 벌 주면 몇 달씩 그대로 입어야 했다.

양씨는 지난 2014년 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광주고등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 소식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한편 양씨의 빈소는 대구 기독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장지는 대구 명복공원이

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동원된 광주출신 양영수(사진) 할머니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광주대성초등학교 1회 졸업생인 양 할머니는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는 커녕 배상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양씨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일본인 선생의 권유로 14살이던 1944년 5월께 일본에 건너갔다.

오빠는 징용으로 끌려가 집에 없었고, 아버지도 항일운동을 하느라 늘 쫓겨 다니는 처지였다. 어머니도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했다. 양씨가 일본행을 결정한데는 “내가 일본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들 털 괴롭힐 것 아니냐”는 생각이 컸다.

그가 배제된 곳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였다. 하루하루가 고된 작업과 감옥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다. 하루 중일 비행기에 들어

## 광주 서구, 주정차 단속카메라 오류로 179대 오단속

광주시 서구청이 주·정차 단속카메라 전산 오류로 보름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179대를 잘못 단속해 과태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유예’ 시간대에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기기 설정 오류로 이 시간대에 단속이 이뤄진 것이다.

서구청은 자체 조사 결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16일동안 화정·치평·농성동 일대 11개 단속카메라에서 오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서구청은 최근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다 뒤늦게 오단속 사실을 발견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께 카메라 보안을 강화하려고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화근이 됐다.

새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켜 단속카메라 관계 프로그램이 ‘현재 시각’ 정보를 받아오지 못하면서 실제 시간과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시간 사이에 1시간여 편차가 생긴 것이다.

이 탓에 점심 유예시간인 오전 11시가 돼도 단속카메라 관계 프로그램은 아직 오전 10시라고 판단해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서구청은 오단속 피해를 입은 179명에게 오단속 사실을 안내하고 과태료를 이미 납입한 20여명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영어유치원 아니라 영어학원이었네

### 광주 유아 대상 영어학원 명칭 사용 위반 등 적발

광주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상당수가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거나 교육부 통보를 받은 18개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3개 학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명칭사용 위반이 6건, 교습비 허위표시 2건, 교습비 미표시 1건, 강사채용 미등록 2건, 시설 미비경 2건 등이다.

일부는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